

IBKS CARBON FINANCE

Invitation to Better Carbon Story

WEEKLY REPORT
VOL.6
2025.07.21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TOP HEADLINES

- EU-UK, 배출권거래제도 연계 협상 본격화
- 캘리포니아, 탄소배출권 제도 강화 움직임, 사회적 비용 반영·연장 논의
- 미 민주당, 선박 탄소세 법안 재발의
- 말레이시아, 다음 달 ‘국가 기후변화 법안’ 도입, 탄소시장 본격 추진
- 중국, 철강·시멘트 산업에 ‘재생에너지 의무’ 첫 도입
- 인도, 2030 목표 5년 앞서 비화석 전력 비중 50% 달성
- Verra, CORSIA용 배출권에 보험 기준 도입
- Gold Standard, CORSIA 보험 평가 절차 공식 출범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EU-UK, 배출권거래제도 연계 협상 본격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와 영국의 배출권거래제도 (ETS)를 연계하기 위한 초안 법안을 공개하고, 27개 EU 회원국에 영국과의 공식 협상 개시를 요청

이는 5월 EU-영국 정상회의에서 ETS 연계를 추진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양측 배출권의 상호 인정 및 제도적 정렬 (alignment)이 핵심

ETS 연계가 성사될 시, 기업들은 EU와 영국 시장에서 자유로운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지며, 양국의 탄소 규제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한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상호 면제를 통해 철강·시멘트 등 탄소집약 품목의 교역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

협정에는 영국의 제도적 통합, EU 법 수용, 운영비 부담 등이 포함되며, 향후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시 세계 최대 규모의 연계 탄소시장이 탄생할 전망

영국 정부는 동 연계를 통해 GDP 0.1% 증가 및 온실가스 2.5%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캘리포니아, 탄소배출권 제도 강화 움직임, 사회적 비용 반영·연장 논의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Cap-and-Trade)의 정책적 정교화 및 제도 안정화를 위해 다각도로 입법을 추진

캘리포니아 상원 환경품질위원회*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가격 상한선 산정 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AB 1207 법안을 미국 상원 예산 위원회에 올리는 것을 만장일치로 승인

동 법안은 미국 환경보호청 (EPA)의 2023년 추정치인 톤당 190 달러 (약 26만 원)를 기준으로 삼음. 이는 연방정부 차원의 관련 데이터가 삭제되는 상황 속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평가되며, 오염의 실제 비용을 반영해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행보로 해석

법안을 발의한 재키 어윈 하원의원은 “연방정부가 기후 대응을 거부 하더라도 캘리포니아는 글로벌 리더로 남을 것”이라며 법안의 상징성과 실효성을 강조

한편, 2030년 이후 탄소배출권 거래제 연장에 대한 논의도 지속. 연장 조항은 AB 1207에서는 제외됐으나, 별도의 법안인 SB 840 을 통해 연장 여부를 적극 검토 중

***상원 환경품질위원회 (Senate Environmental Quality Committee)**

:캘리포니아 주의회 내의 위원회로, 환경 관련 법안을 심의/검토

미 민주당, 선박 탄소세 법안 재발의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선박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2건을 재발의

‘국제 해양 오염 책임법 (International Maritime Pollution Accountability Act)’은 2027년부터 미국에 입항하는 5,000톤 이상 외항 화물선에 대해 탄소 배출량 톤당 150달러 (약 21만 원)의 요금을 부과 (매년 5% +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하고, 수익금은 친환경 선박 전환, 항만 전기화, 해양기술 R&D 등에 사용

법안 발의자들은 동 법안이 10년간 약 1,000억 달러 (약 139조 원)의 수익을 낼 것이라 추산

또 다른 ‘청정 선박법 2025 (Clean Shipping Act of 2025)’는 선박 연료의 탄소 집약도를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10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며, 연간 30일 이상 운항하고 화물 총 톤수 400톤 이상인 선박에 적용. 감축 초과분은 다음 해에 이월 사용 가능

동 2건의 법안 재발의는 미국의 독자적인 선박 배출 규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로 평가

말레이시아, 다음 달 '국가 기후변화 법안' 도입, 탄소시장 본격 추진

말레이시아 정부가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탄소 배출권 거래를 포함한 '국가 기후변화 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

동 법안에는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배출권 거래 제도 운영, 파리 협정 제6조에 따른 국외감축실적 (ITMO) 거래 감독 체계 등이 포함. 말레이시아는 곧 싱가포르와의 제6.2조 협정과 일본과의 공동 크레딧 메커니즘 (JCM) 파트너십을 마무리할 계획

관계자들은 탄소세 또는 배출권거래제 (ETS), 의무적 보고, 부문별 감축 계획 등 정책 수단들이 단계적으로 준비될 것이라 밝힘. 법안 시행을 감독·관리할 별도의 기관과 국가기후변화위원회도 신설될 예정

말레이시아는 ASEAN 의장국으로서 동 법안 발의를 통해 동남아 국가들을 위한 공동 탄소시장 체계 개발을 주도하고자 함.

중국, 철강·시멘트 산업에 ‘재생에너지 의무’ 첫 도입

중국 정부가 철강, 시멘트, 폴리실리콘,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최초로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를 부과

이들 업종은 2025~2026년까지 전력 소비량 중 약 3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해야 하며, 데이터센터는 80%로 별도 규정

동 조치는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RPS)*의 확장으로, 기존 발전소 등 전력 공급자에게만 적용됐으나 이제 전력 소비 기업도 포함

철강·시멘트 업종은 이미 중국 국가 ETS에 편입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배출권 수요와 가격에 영향 줄 가능성이 제기됨.

발전소는 고정가격 판매 대신 중공업 기업과 직접 거래해야 하며, 녹색전력인증서 (GEC) 시스템 기반의 거래가 이뤄짐

향후 24시간 단위의 실시간 인증 체계 등 RPS 제도의 고도화가 예상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 : 정부가 전력 소비/생산 시 일정 비율 이상 재생에너지 사용을 강제하는 제도
- : 중국의 경우 성(省)별 목표치를 정하고, 각 지역에 맞는 현실적 비율을 부여
- : 중국 내 인증방식- GEC (Green Electricity Certificate) 발급 및 거래

인도, 2030 목표 5년 앞서 비화석 전력 비중 50% 달성

인도가 전체 전력 설비용량의 절반을 태양광, 풍력, 수력, 원자력 등 비화석 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

이는 당초 2030년 목표보다 5년 앞선 성과로, 인도의 에너지 전환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시사

인도는 2030년까지 비화석 전력을 500GW로 확대할 계획. 이를 위해 수력과 원자력을 포함해 배터리 저장, 재생에너지 부품의 순환경제, 그린수소 확대 등 다양한 탈탄소 수단을 강화 중

2024년 한 해 동안 인도에는 약 28GW의 태양광·풍력 설비가 추가

됐으며, 2025년 1~5월에는 16.3GW가 추가, 6월 말 기준 대형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의 총 용량은 184.6GW로 재생에너지가 급성장하는 추세

Verra, CORSIA용 배출권에 보험 기준 도입

자발적 탄소시장 (VCM) 인증기관 Verra가 ICAO의 국제항공 탄소 상쇄 및 감축 제도 (CORSIA)에서 사용 가능한 탄소배출권 (VCU)에 대해 새로운 보험 기준을 발표

대상은 2021년 이후 발행되고, 파리협정 제6조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의 배출권으로, CORSIA 라벨을 받기 위해 해당 배출권은 상응 조정이 완료된 증빙을 보유하거나, Verra가 승인한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동 보험은 배출권이 이중청구, 무효화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금전 혹은 대체 크레딧을 보상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 보험사는 높은 신용도를 갖추고, Verra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Verra는 향후 적격 보험 리스트도 공개할 예정으로, 탄소시장 신뢰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

Gold Standard, CORSIA 보험 평가 절차 공식 출범

자발적 탄소시장 (VCM) 인증기관 Gold Standard가 국제항공 탄소상쇄 제도인 CORSIA 1단계 (2024~26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보험 평가 및 승인 절차를 시작

동 보험은 국가의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한 이중청구가 발생 시 보험사가 대체 크레딧 혹은 금전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리스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경로를 제공

보험 심사는 글로벌 보험 중개사 하우든 (Howden)이 담당하며, 평가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독립 전문가도 선발할 예정

보험 기반 메커니즘은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한 CORSIA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공급 병목 완화 및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IBKS 탄소금융본부 사업

탄소배출권

■ 규제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국내 탄소배출권 장내 거래(KRX)
- 국외 탄소배출권 현물 거래(EU, 중국 등)

■ 자발적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VERRA, GS 등 매매
- 비규제 글로벌기업 대상 배출권 공급

■ 국내외 탄소배출권 사업개발

- 규제 및 자발적 시장 통용 가능 국내외 배출권 사업 개발 및 배출권 확보

환경에너지 파생상품

■ 에너지·원자재 선물 거래

- 탄소시장 유관 종목 개발 및 제공
- 원유, 납사, 곡물, EU배출권 등

■ 탄소배출권 펀드 개발 및 운용

- 업종별 특화 탄소배출권 펀드 상품화
- 국내외 탄소배출권 펀드 참여

■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조달

- PPA Offtaker / Spot REC 중개 & 주선
- 국내 발전소와 글로벌 RE100 기업 연계

탄소 금융조달

■ 구조화 상품 개발 및 중개

- Clean-Tech 기업 & 기술 & 설비 투자
- 주식, 채권, 원자재 등 파생결합분야 확대

■ 친환경 자산개발 PF

- 친환경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 스마트팩토리, 친환경공정설비 도입 등

■ ESG 특화 벤처 투자

- K-Taxonomy 기반 평가 및 금융 제공
- 기업 성장 동력 & Value & 수익 확보

■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IBK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수수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IBK투자증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BK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20호
(2026.03.17 ~ 2027.03.16)

IBK투자증권 탄소금융부

carbon@ibks.com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